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469
----------	-----

발의연월일 : 2008. 11. 25

발의자 : 방종영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는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경제기반을 흔들리는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이행.
-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 보장.

붙임 :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 1부. 끝.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

-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선(先)지방 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지방의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희망의 싹이 없어진 지금 지역의 심각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첨단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현재 조성 및 분양중인 지방산업단지의 추진에도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에 달성군의회는 17만 군민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당초에 약속한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보장하라.

2008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

- 방종영 의원 외 7인 발의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방 종 영	방 종 영	방종영
이 석 원	이 석 원	이석원
김 기 석	김 기 석	김기석
정 종 태	정 종 태	(정)
김 순 호	김 순 호	김순호
채 명 지	채 명 지	채명지
서 정 우	서 정 우	서정우
정 명 자	정 명 자	(정)